

# 도의회 첫 인사청문회 '관심 집중'

### 대상자는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 도덕성 검증 비공개 ·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로 진행

### 오늘 경과 보고서 채택 후 22일 본회의서 결과 통보

전북도의회는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김천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일 실시했다.

전북도의회 인사 청문회는 지난 1월 16일,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24년여 만에 처음으로 전북도와 협약을 어 인사청문회 도입을 결정했다. 이번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 첫 번째 순서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정호운)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원 8명과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을 포함, 총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개의 선포, 청문위원 소개, 위원장 인사말, 안건 상정, 전문위원 경과보고, 후보자 선서, 후보자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보고(20분 이내), 인사검증,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 청문은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개인경력, 병역, 부동산, 세금 납부 여부 등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이뤄졌다. 이어 공개회의로 실시된 전문성은 경영총괄, 사업 및 조직관리, 재무건전

성, 사회적 책임, 균형발전 등에 대한 업무능력 검증이 이뤄졌다.

청문결과 20일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뒤 오는 22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의장에게 보고 한 뒤 의장이 도지사에게 청문결과를 통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호운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짐으로써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인신 공격, 흠집 내기가 아닌 인품의 자질과 도덕성, 전문성, 정책능력 등을 검증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사의 인사권 오남용을 견제하며 전북도 산하 공기업 등의 경영합리화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천환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 '농어업인 미세먼지 질환, 산재로 인정해야'

### 김중희 의원 법안 발의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중희 의원 (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농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업무를 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2건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법'이 제정될 만큼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고, 배기가스 등에 노출된 환



경미화원이 산재로 인정받는 등 육외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야외활동이 잦은 농업인의 경우에는 육외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있고,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농어업인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 농어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법」을

적용받는다. 김중희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포함되고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추진 중이지만, 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미화원과 배달원 등 야외노동자에 대한 산재 재해 인정 근거가 있는 만큼, 야외 노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 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중희 의원은 지난달 미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업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뉴시스

# 평화당, 여야 4당 중 선거제 개혁안 첫 추인... 만장일치

### "5·18 왜곡 특별법 반드시 처리... 양보할 수 없어"

민주평화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 잠정합의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평화당은 19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틀째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논의의 문을 열었다.

당 최고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평화당은 선거제 개혁 잠정합의안을 추진하고 해당 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5·18 왜곡처벌에 대한 내용이 담긴 5·18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평화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잠정합의안이 호남 지역구 의원을 줄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보충하는 방식 등으로 노력하기로 정했다.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병완 원내대표도 이날 총회 후 기자회견과 만나 "지역구 축소 우려도 있었지만 선거제 개혁 없이 정치개혁을 생각할 수 없다는 대의명분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인 유성엽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 이어 호남 지역구 축소를 예방하기 위한 보완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하나의 행정구역에서는 3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둘 수

없거나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4개 이상의 시·구를 포함할 수 없다든지, 과거 동농복합구로 대도시 의석을 줄이고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해서 대체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의미 있기 때문에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차례 말했지만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연대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 이러한 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동의한 부분"이라며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전북도-민주당 지도부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오늘 국민연금공단서... 과거보다 시기 앞당겨

전북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2019 국민연금공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안호영 도당위원장, 이춘석 의원, 지역위원장,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과거 예산정책협의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을철에 진행됐고 지난해는 11월에야 협의회가 개최됐지만 각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5월이면 대부분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는 이보다 8개월 이상 시기가 앞당겨졌다.

또 부처 예산안에서 제외된 사업들을 국회 단계에서 국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이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7조8,600억원 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2년 연속 7조원대 예산 확보는 물론 향후 8조원대 국가예산 시대를 열기 위한 교두보를 만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북도 국가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SOC와 농림수산물 분야의 정부예산 편성 투자 축소가 예상되고 전북도 계속 사업 중 올해 구시포 국가어항 등 199건 3332억원 상당의 사업이 종료되고, 2020년 사업 만료 도래로 102건 2357억원 감소하는 등 여건이 그리 좋지 않다.

이에 전북도는 ▲삼라농성 농생명산업 ▲미래신산업 ▲여행·체험1번지 ▲새만금·짚바리 등 전반에 걸쳐 대규모 신규사업을 발굴해 미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진성 기자

# 與 "김학의 사건 황교안 개입 여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재조사를 강조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학의·장자연 사건에서 보듯 경찰·검찰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 수사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같은 독립적 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전 차관 임명에 최소 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 김 전 차관 사건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황 대표와 당시 민정수석으로 인사 검증을 맡았던 박상도 한국당 의원에도 책임을 물었다. /뉴시스

까만 오다는  
풍나무 정령이 모여 있는 것이며,  
당뇨병과 오장에 이로우며,  
배고픔을 잊게 해 주고,  
오래 먹으면 귀와 눈을 밝게 한다.  
-동의보감> 당액 편

## 부안의 명품 먹거리 뽕비빔밥 & 누에술(그라주)

**부안 명품 참뽕으로 만든 뽕비빔밥**  
조단백질이 풍부한 뽕잎과 뽕잎을 넣은 밥에 뽕잎나물과 변신 양파 등 나물류를 넣고 오리고추장으로 비벼 먹는 부안 건강식품. 부안 주요 음식점 12곳에서 인기가 판매 중이다.  
문의 063-580-3855

**부안 누에로 만든 명품, 그라주**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누에술로 청정 지역 부안의 뽕나무잎을 먹고 자란 누에를 해풍으로 건조하고, 직접 도정한 국내산 쌀로 빚은 증류주에 숙성시킨 부안의 대표 명품주다.  
36.5도 (375ml), 25도 (375ml), 17도 (375ml)  
문의 063-584-9960 www.gangsanwine.com

**지역 경제 활성화의 버팀목, 전북대학교 향토건강식품명품회사단**  
2015년 7월, 전북대학교와 부안군이 주관하고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결성해 출범했다. 부안의 건강하고 유일한 소재가 고부가 가치 건강식품으로 제조 및 가공될 수 있도록 식품 가공 기업을 지원하며, 지역의 문화·관광·체험을 연계한 농업·농촌·농업·농촌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한다.